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3(금) ~ 2025.1.9(목)

제공일시 2025 1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3(금) ~ 2025.1.9(목)

제공일시 2025 1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청정수소 생산에 보조금 지급... 글로벌 수소시장 지각변동 예고

- 미국이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유럽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수소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함

-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청정수소 세금공제 최종안으로 세계 수소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함. 이는 수소경제 선도국을 표방하는 한국에도 위기가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안은 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함.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에는 최대 수준의 지원을, 천연가스나 원자력 기반 생산에도 조건부 지원을 제공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1.5\)](#)

2. EU 해운규제 본격 시작... 향후 4년 매년 2%씩 온실가스 줄여야

- 유럽연합(EU)의 청정해양 연료 규제가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해운업의 물류 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로이터가 6일(현지시각) 밝힘.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퓨얼EU 마리타임(Fuel Maritime)'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EU 규제임

- 해운업 종사자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해운업계는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 지속가능성을 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기회로 이끌지 아니면 비용과 부담만 증가시키는 골칫덩이로 끝날지 시험대에 올라선 셈임

[\(임팩트온 2025.1.8\)](#)

3. 중국, 세계 90% 장악한 '리튬인산철' 양극재 기술 수출 통제한다

-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함. 중국은 상용화된 기술 대신 연구단계인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해 장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임

- 6일 중국 지에미엔신문에 따르면, 2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수출제한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이 추가됐으며, 세부적으로 △배터리용 리튬인산철(LFP) 제조 기술 △배터리용 리튬망간인산철(LMFP) 제조 기술 △탄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5.1.6\)](#)

국내 정책

1. 과기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862억 투자

- 정부가 기존의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 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AI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힘
-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임

[\(신소재경제 2025.1.8\)](#)

2.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움
-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됨
-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함
- 또,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됨.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도 늘어남

[\(더나은미래 2025.1.3\)](#)

3. 반도체 기업에 정책금융 14조 지원... 무역금융 360조 투입

-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반도체에 14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원으로 확대함.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섬.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함. 이와 함께 탄소감축 핵심기술, 고부가 소재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함

[\(뉴스1 2025.1.2\)](#)

글로벌 기업

1. 혼다·도요타, 수소연료전지 설비투자 보조금 획득

- 일본 정부가 혼다와 도요타에 수소연료전지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함. 자국 기업의 수소연료전지 제조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임
- 혼다의 경우 최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닛산자동차와 합병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도요타의 양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복병’으로 주목받고 있음
- 도요타는 이번 보조금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연간 판매량을 1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임. 혼다는 브랜드 최초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더구루 2025.1.5\)](#)

2. MS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달러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달러(약 118조원)를 투자함
- MS는 3일(현지시간)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 명의로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25 회계연도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세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I 지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8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SBS비즈 2025.1.4\)](#)

3. 테슬라 배터리 공급사 日파나소닉 “장기 목표는 中 의존도 완전 배제”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 에너지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함. 선제적으로 중국과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앨런 스완 파나소닉 에너지 북미법인 사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중국산 공급 비율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줄일 계획”이라고 말함

[\(IT조선 2025.1.7\)](#)

4. 샤오미, 한국법인 사업 목적에 ‘자동차 판매업’... “전기차 시장 진출 염두”

- 지난해 하반기 한국법인을 설립한 중국 샤오미가 사업 목적에 ‘자동차 판매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됨. 업계는 이에 대해 향후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음
- 7일 조선비즈 취재 결과, 샤오미 한국법인(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에 ‘자동차(부품 포함) 수입 및 도소매업’이 포함됨. 샤오미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기차 판매 계획은 없다”고 함

[\(조선비즈 2025.1.7\)](#)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中 하이티움과 글로벌 BESS 시장 진출 '맞손'

- 삼성물산이 중국 배터리 기업 하이티움(Hithium)과 손잡고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 공략에 나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더욱 힘을 주는 모습임
- 하이티움은 지난 6일 중국 사면에 있는 본사에서 삼성물산과 글로벌 BESS 시장 진출에 협력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전 세계 BESS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임
- 하이티움은 현재 BES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1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추산함
- 하이티움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 배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더구루 2025.1.7\)](#)

2. 현대제철, 트럼프에 '10조' 선물... 제철소 짓는다

- 현대제철이 미국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철강산업 기지를 건설함.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제철소를 짓고 이곳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등을 인근 조지아주 현대차·기아 공장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임
- 7일 한·미 경제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州) 정부와 접촉해 투자 여건을 타진하고 있음. 이 중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인근 지역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2025.1.7\)](#)

3.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소 전주기 관리 기술 선제 확보... 韓·美 특허 출원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과 한국에서 수소 저장·수요량을 예측하고 전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내놓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한 축인 '수소'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임
- 해당 특허는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최종 소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전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담고 있음

[\(더구루 2025.1.6\)](#)

4. SK에너지, 국내 정유사 최초로 SAF 유럽 수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 선도

-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유럽에 수출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있음
- SK에너지는 지난 5일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생산한 SAF를 유럽으로 수출함
- SK에너지는 이번 수출을 발판으로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SAF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경기신문 2025.1.5\)](#)

바이든, 미 대서양·태평양 해역서 신규 석유 시추 금지

-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멕시코만을 포함한 약 6억2500만에이커(약 253만km²)의 미국 해역에서 신규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석유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인 보호 정책이라고 밝혔다

-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획했던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생산 확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화석연료 개발 제한 조치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이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번 조치가 제정된 지 72년 된 연방 법률인 '외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기반해 이뤄졌기 때문임

- 이 법률은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와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만, 개발금지 지역 지정을 철회할 명확한 권한까지 주지는 않음.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차후에 이번 조치를 뒤집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CNN은 보도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인 2017년 연안 시추를 제한한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고 행정명령을 통해 북극과 대서양 등에서 연안 시추 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음. 하지만 2019년 알래스카 소재의 연방 법원은 당시의 시추 확대 명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음

-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연안 지역 사회와 해양 생태계를 석유 시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 비영리단체 시에라 클럽의 벤 질러스 이사는 “해양 시추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평가했음

-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인수위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바이든의 결정은 미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바이든은 높은 유가를 그의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 취임을 불과 2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보수 성향의 휴 휴잇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웃기는 일”이라며 “취임 즉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석유 산업 역시 반발했음. 미국독립석유협회(IPAA) 해양위원회의 론 닐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며 “새로운 지역에서의 미래 석유·가스 탐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해 업계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음

- 그러나 CNN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석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유가정보서비스(OPIS)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인 톰 클로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석유 공급, 수출, 수입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멕시코만에 이미 가동 중인 해상 굴착 장비가 많으며, 신규 해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통상 6~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음

- 이번 조치는 기존 해상 임대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스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쿡 인렛(Cook Inlet)과 중부 및 서부 멕시코만 시추 지역 역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두 지역은 미국 전체 석유·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1.7\)](#)